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10호
2021. 6. 14

정책동향

- 건설 자재난 장기화,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
-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 대응 시급

산업정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프라 투자

건설논단

- 건설기업 ESG, 기업 체질 개선·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중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 자재난 장기화,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

- 정부는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

■ 최근 건설 자재난 상황 심각, 특히 철근 가격이 2008년 이후 13년래 가장 높아

- 최근 건설 자재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철근난이 심각함. 이러한 문제는 공사 견적 시점과 공사 진행 시점 간에 수개월에 달하는 시차가 존재하는 건설현장에서 수급뿐만 아니라, 공사비 상승 등 향후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5월 첫 주, 철근 거래가격은 톤(t)당 93만원(도매·현금지급기준)을 기록함.¹⁾ 이는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이며, 다수의 중소 건설사가 자재 수급 문제를 겪고 있음.

■ 2008년 ‘철근 대란’ 때와는 달리 이번 사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듯

- 최근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자재난 사태는 ‘철근 대란’이 발생한 지난 2008년과 달리 1년 만에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표 1> 2008년과 2021년 국내 철강재 가격 상승 배경 및 환경 비교

구분	2008년	2021년																
요인	유가 급등, 중국 철강 수요 증가 → 철스크랩 가격 급등	코로나19 사태 회복 및 경기부양 수요 증가, 탄소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전기로를 이용한 철강 생산체제로 전환 → 철스크랩가격 급등																
주요 상황	생산 물가 주요 품목 증가율(% 통계청) <table><tr><th>비금속광물</th><th>제1차금속</th><th>금속가공품</th></tr><tr><td>11.5</td><td>23.9</td><td>31.8</td></tr></table> 일반철근 +64.8%, 고장력철근 +64.2% 봉강 +6.1%, 형강 +70.5%, 중후판 +40.3%, 건축용금속공작물 +31.4%, 건축용판금제품 + 68.4%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금속가공품	11.5	23.9	31.8	2020년 3/4분기 이후 가격이 상승, 연말 공사현장에서는 철근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2021년 1~5월 주요 금속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였고 고철 수입 및 국산품 모두 급등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금속가공품																
11.5	23.9	31.8																
추이	2008년 7월 이후 증가세 둔화, 연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해 비교적 단기에 상황 종료	2021년 상반기 가격 급등 여름 장마철에 가격 조정 여부 관건																
건설 경기	2008년 건설투자 증감률(% 한국은행) <table><tr><th>1/4</th><th>2/4</th><th>3/4</th><th>4/4</th><th>연간</th></tr><tr><td>-1.9</td><td>-0.7</td><td>0.2</td><td>-7.3</td><td>-2.7</td></tr></table> → 건설경기 침체 초입	1/4	2/4	3/4	4/4	연간	-1.9	-0.7	0.2	-7.3	-2.7	2021년 건설투자 전망[% 한국은행(2021.02)] <table><tr><th>상반기</th><th>하반기</th><th>연간</th></tr><tr><td>-1.2</td><td>2.6</td><td>0.8</td></tr></table> → 건설경기 회복 초입	상반기	하반기	연간	-1.2	2.6	0.8
1/4	2/4	3/4	4/4	연간														
-1.9	-0.7	0.2	-7.3	-2.7														
상반기	하반기	연간																
-1.2	2.6	0.8																

1) 5월 28일 기준 7대 제강사 철근(D10mm)의 유통가격은 톤당 135만원 기록, 첫째 주 90만원에서 3주 만에 100만원을 넘어섬.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의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건설사의 부분 손실은 불가피하고, 4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피해는 중소 건설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 산업연관표 380개 기본 분류에 따른 건설산업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는 ‘건축용 금속 제품’, ‘철근 및 봉강’, ‘구조용 금속 제품’, ‘철강관’으로 이들 자재는 전체 자재투입의 27%를 차지함.

■ 철강 생산 10% 이상 증산해야 하며, 건설산업에 최소 60만톤 이상 추가 철근 필요

- 국내 철근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였는데, 중국 수입량 감소 및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 올해에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의 증산이 필요함.
- 조강설비 10% 증가는 90만~100만톤의 철근의 추가 생산을 의미하고, 2018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철근 생산량 중 건설 부문에 투입되는 비율 56.5%를 감안하면, 증산된 철근 물량에서 60만톤 정도가 건설 부문에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연간 전기로 조강 생산 추이 및 건설산업 투입 철근량 추정치
연간 전기로 조강 생산 추이 건설산업에 투입되는 철근량 추정치 추이



주 : 철강협회 제공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021년은 전년 대비 10% 증산했을 경우 추정치임.

■ 건설 생산체계, 현실 단가 반영하고 공사용 자재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해야

- 건설 생산체계 점검은 ①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② 공사용 자재 수급불안 대응 및 개선(지침 작성,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③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함.
- 정부 공공발주자는 공사 예정가격 및 원가 산정에 건설공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그리고 기본형건축비 등의 자료를 사용하는데,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원가 및 설계 가격과 시공 단가 간의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바 최근 주요 자재 가격 변동을 원가 산정에 반영해 현실화된 단가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정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대가 대비 100분의 3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의 에스컬레이션(E/S) 규정이 있지만, 최근 자재 변동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면 유찰되는 공사가 많아지고 계약이 성사되었어도, 자재 단가 차이로 수급이 어려워 향후 수많은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음.

●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 현실 단가 반영 개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 <표 2>의 주요 투입 자재는 공사에 투입이 많은 자재로, 산업연관표의 세부 부문별 3대 중간투입재 및 투입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함.
- 발동조건으로 해당 자재의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변동 폭을 상회할 경우를 내세워 원자재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변하는 시기로 한정함.
- 가산 방법은 작성된 단가 원가에다 해당 자재의 3개월 평균 변동 폭을 조정하여 가산하는 방식임.

<표 2>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 현실 단가 반영 개념

구분	내용
주요 투입 자재 선정	- 공사에 투입이 많은 자재로 산업연관표의 세부 부문별 주요 3대 자재를 기준으로 하면 향후 물가 모니터링 및 기준선정에 좋을 것임 - 투입 자재는 레미콘, 건축용금속 제품, 철근 및 봉강, 아스콘 및 아스팔트, 선재 및 궤조, 콘크리트제품, 경우, 철강관 등이 될 것임.
발동 조건	-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변화가 최근 5년 평균 변동 폭을 상회할 경우
가산 방법	- 해당 자재의 최근 3개월 평균 변동 폭을 산정된 가격에 추가하여 계산

■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 대응 : 지침 작성,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명확화해야

● 공사용 관급 자재 수급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주 및 공사 수요 기관에 자재가격 및 공사용 자재 수급에 대한 적정 대응 지침 작성 및 하달이 필요하고, 공사용 관급자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특별 감사 사전 통보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을 명확화해야 함.

<표 3> 공사용 자재의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 방안

1. 국토부 및 기재부, 행안부 차원의 발주 및 공사 수요 기관에 자재가격 및 공사용 자재 수급에 대한 적정 대응 지침 작성 및 하달	
내용	- 핵심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방법에 의한 적절한 조치 유도 - 계약상대자의 사급자재 대체사용승인 신청 접수, 대체사용 승인 서면통보, 서면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대가를 제39조, 40조에 의한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에 합산지급 유도
2. 공사용 관급자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특별 감사 사전 통보	
내용	- 물가 급등시 계약내역서와 착공 내역서 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발주자의 일방적인 직접비 증액 요구하는 불공정행위 근절 및 불공정행위 발생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 적극 조치
3. 건설 관급자재 조달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 명확화	
내용	- 자재난이 발생시 관급자재 조달 지연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조달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 - 조달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달 지연에 따른 계약 기간 변경을 유도

■ 건설업과 건설자재업,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단계적 대응 필요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철강 건설 자재의 수급 문제는 공사 지연을 통해 인프라 시설 혹은 건축물 등의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안정적인 회복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음.
 - 건설자재 업계는 가격 인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에서는 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재 공급이 하루만 중단되더라도 공사현장에서는 1~2주간 공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예고 없는 건설자재 공급 중단은 건설 공정에 큰 차질을 초래함.
 - 건설자재의 가격 불안정성은 수급문제 심화로 이어져 공사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건설투자 회복을 지연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최근 가격 상승은 철강 자재에 한정되었지만,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코로나19 종식 기대에 따른 전 세계적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조절 등임 감안하면, 향후에는 가격 상승이 여타 주요 건설자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큼.
 - 기업 차원에서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초래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대처해 건설자재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건설업과 건설자재업의 상호 유기적 협력 가운데 단계적 대응이 필요함. 1단계 유통사의 철강 건설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적극 강화하고, 2단계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를 확보해 추가 자재난 확대를 막아야 하며, 3단계 지역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 마련해야 할 것임.

<표 4> 건설 자재난 단계적 대응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성격
1단계	유통사의 철강 건설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 적극 강화	철강 건설자재 수급난 대처
2단계	시멘트, 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 확보	비금속 광물제품 물가 모니터링
3단계	지역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 마련	적정 생산량 장려 및 지역별 수요 파악해 공동거래 유도

박철한(연구위원 · igata99@cerik.re.kr),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민간 건설공사 대응 시급

- 민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한 계약금액 조정 문구 마련 등 맞춤형 조치 필요 -

■ 주요 건설자재 공급 부족으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 사례 속출

-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공·민간공사 모두 공사 중단 및 지연 사례가 급증함.²⁾
 - 지난 3~4월 주요 건설자재(철근·레미콘·PHC 파일 등)의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59곳에 달하며 특히, 철근 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 현장은 43곳(7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과 민간 건설공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현장 : 30곳(평균 공사 중단일수 : 22.9일)’, ‘민간현장 : 29곳(평균 공사 중단일수 : 18.5일)’로 조사되어 최근 건설 자재난으로 공공·민간 건설공사 참여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자재가 급증 피해 경감을 위한 발 빠른 정부의 대응 현황

- 정부는 건설 자재난을 ‘코로나19 사태’, ‘역대급 폭우’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부처와 조달청은 관련 지침 및 방안을 발표함.
 - (기획재정부)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³⁾’과 ‘(자재 가격 변동) 계약금액 조정제도⁴⁾’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안내」를 작성하여 배포함.⁵⁾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더해 민간공사와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시함.⁶⁾
 - (조달청) 시설 자재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공공 공사비 반영, 철든 등 특정 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함.⁷⁾
- 최근 철근을 비롯한 자재난으로 인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기업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정부는 신속한 관련 대책 마련과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 “자재 수급 불안에 건설 현장 ‘휘청’... 공사 중단·지연 속출, 매일경제(2021.5.20).

3)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5조제3항, 제23조제1항.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제2항.

5)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818(2021.6.3)호, “‘자재 대란’ 진화 나선 정부”, e대한경제(2021.6.7).

6) “‘자재 대란’ 진화 나선 정부”, e대한경제(2021.6.7).

7) “조달청, 철근 등 자재 수급 안정에 적극 대응”, 조달청 보도자료(2021.5.27).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기반을 둔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 권장과 관련 표준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정 및 운용⁸⁾하고 있음.
 - 민간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적으로는 담당기관의 규제 및 당사자 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표로 함.⁹⁾
 - 그러나, 불가항력 및 책임의 범위와 계약조건의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여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르게 분쟁의 소지가 있음.
- 특히,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이를 미준수(발주자 미인정, 협의 거부 등)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 민간 건설공사는 원도급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정해진 공사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총액계약 형태로 체결되며 책임준공의 의무를 가짐.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기 만회를 위하여 대체 자재 수급에 따른 상위자재 활용(철근 : SD400을 SD500으로 대체)시 관련 추가 비용을 시공사가 일괄 부담함.

■ 민간 건설공사 재고 방안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같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자재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문구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자재비 급등시 공기연장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리절차에 관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함.
 - 더 나아가, 사적 자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계약시 일방의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내 관련 규정(안) 마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김화량(부연구위원 · hrkim@cerik.re.kr)

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 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6>”.

9) <연구기관 리포트> 불명확한 계약조건 개선해 분쟁 가능성 막아야, e대한경제(2015. 10.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프라 투자

- 글로벌 인프라 건설시장 급성장과 한국판 SOC 디지털화 정책의 연계 중요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회복

- 2021년 3월에 미국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8년간 2.25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개최된 GII¹⁰⁾에서 글로벌 건설기업의 리더 그룹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COVID) 인프라 투자 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국은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 2년 동안 빠른 경제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운송, 상수, 통신 등 인프라 건설시장 중심으로 국가기반시설 재건과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5월에 McKinsey사 의해 개최된 GII 포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의한 생산성 혁신’, ‘협력적 사업 조달’, ‘인프라 사업의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인프라 복원력 중심의 생애주기확보’ 등의 핵심 주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SOC 중심의 국가 경제회복을 위한 준비를 강조함.
- 인프라 건설시장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요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전략은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인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친환경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21년 2분기에 Fitch Solution사는 미국, 중국 등과 같은 글로벌 인프라 건설시장의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의 인프라 건설시장에 대한 잠재 리스크와 성장률을 발표하였음.
 - 2021년부터 향후 10년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별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의 투자 규모는 연평균 3.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2025년까지 약 160조원 재원 투입과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

- 2020년 7월에 수립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에 이어 8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방안’에 제시된 5대 분야와 20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도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의 대규모 재원 투입과 1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음.

10) GII(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는 2012년부터 글로벌 건설 전문 컨설팅 기업인 McKinsey & Company가 주관하여 글로벌 인프라 산업의 핵심 현안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는 포럼으로, 2021년에는 글로벌 인프라 건설시장의 87%를 차지하는 18개 국가 500명의 전문 리더 그룹과 포럼을 진행하였음.

-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 관리체계 등 SOC의 디지털화, 데이터 댐 등 ICT 고도화에 따른 향후 인프라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환경에 대한 대응력과 미래 국가 차원의 경쟁력 강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 특히, 2025년까지 안전 및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핵심 SOC의 디지털화 사업에 약 16조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향후 글로벌 인프라 건설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의 인프라 건설시장도 ICT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및 성장이 예상됨.
-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의 핵심 트리거(trigger)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 재원 조달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인프라 건설의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대응력 및 경쟁력 확보를 촉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인프라 건설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회복과 함께 친환경 기반 복원력 중심의 사업이 강조되고 있음. ICT의 급성장과 보편화로 인프라 건설의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대응력 및 경쟁력 확보를 촉진할 것임.
- 기후변화에 의한 국민의 안전성 강조,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보급화 가속, 부족한 공공재원 조달의 효율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프라 건설시장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공공재원과 함께 급성장할 것임.
 - 정부의 인프라 건설시장 확장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의 맞춤형 전략이 선제적으로 수립되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공적인 재도약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함.
- 국내 주요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제도 및 기준 정비도 병행되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판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 기반의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신속한 경제회복이 가능함.
 - 특히 향후 안정적 재원 조달을 통한 성공적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이행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및 기준이 선제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함.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건설기업 ESG, 기업 체질 개선·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중요

코로나19는 양극화 심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에 대한 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ESG가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를 담보할 수 있는 기업경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ESG가 건설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ESG 보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설기업은 주로 대형기업에 한정돼 있다. ESG는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적 성과와 함께 고려하는 비재무적 정보다. 따라서, ESG에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주식이나 회사채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은행 등을 통해 타인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상장기업이나 대형종합건설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이나 전문건설기업은 ESG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건설시장에 진입해 있거나 진출할 의사가 있는 건설기업도 ESG에 관심을 가진다. 특히,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ESG 기준 충족은, 다자개발금융기관 혹은 개별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이나 개발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획득에 필요한 기본 조건의 충족을 의미한다. 건설기업이 ESG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세 번째 계기는 부동산 부문이다. 투자기관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에 투자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도 ESG가 고려되고 있다. 또 다른 계기는, 종합건설업체의 ESG 관련 이니셔티브다. 실제로 ESG에 관심 있는 종합건설업체가 함께 시공에 참여할 협력 전문업체 선정에 ESG 평가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SG에 대응함에 있어, 건설기업은 일정 편향을 보인다. 건설기업들은, ESG 중에서 'E'에 치중해서 환경 관련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 부문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부문 대응은 기업 내부의 조직과 문화 변화 같은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환경적 책임은 기업 내부를 혁신할 필요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도입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기업을 이익 극대화의 관점이 아니라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이익 극대화나 사회 전체에 대한 책무 혹은 기업 시민의 책임 등을 이행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ESG의 확산도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적합 기준이 아니라, 모든 구성요소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노력의 측정지표로서 ESG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형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기업, 그리고 종합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 등 모든 건설기업이 장기적으로 내부의 기업의 문화와 내부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ESG 기준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건설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개입돼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다우존스 등의 ESG 평가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공개된 평가기준을 갖춘 ESG 지수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ESG 지수를 기록한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이나 경영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일보, 2021.6.2>